

#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 흐름과 규제개혁<sup>1)</sup>

## 요 약

인구 및 사회구조나 기술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산업 전반, 특히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유인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는 여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모빌리티, 핀테크,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산업혁신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주요국들도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물론 규제정책도 추진하였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 비용 감축과 같은 정책이나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시장 진입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 안착을 통해 경제성장과 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규제 방식의 전환은 물론 추진체계의 효율화와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시된 과제들은 이미 각국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행되는 정책이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1) 본 연구는 2023년 발간된 산업연구원 보고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1. 산업 환경 변화와 규제개혁 이슈

## (1)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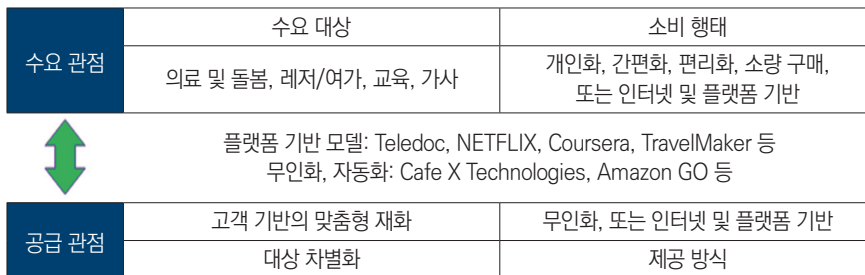
201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경제, 또는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기술의 진전이나 사회구조 변화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과 인구의 고령화나 1인 가구의 확산, MZ 세대의 등장 등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요인은 수요와 공급 시장에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면서,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등장과 연관성을 가진다.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는 수요 대상과 소비 행태의 다양화를 유인하며, 기술의 진전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며 차별적으로 대응할 제공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주요국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은 핀테크, 유통, 모빌리티, 헬스케어는 물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서 혁신 흐름이 활발하다고 하겠다. 실제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들이 출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트래블메이커(TravelMaker),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또는 원격 의료를 제공하는 텔레닥(Teledoc) 등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모델로, 개인화, 편리화,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카페 엑스 테크놀로지스(Cafe X Technologies)에서는 로봇 바리스타를, 아마존고(Amazon GO)의 경우 무인 매장 기술이 적용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 환경 변화는 각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에서

〈그림 1〉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산업혁신의 흐름



자료: 저작 작성.

기술 기반, 또는 플랫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 시장에 제공되는 모습을 보인다.

## (2) 제도 미비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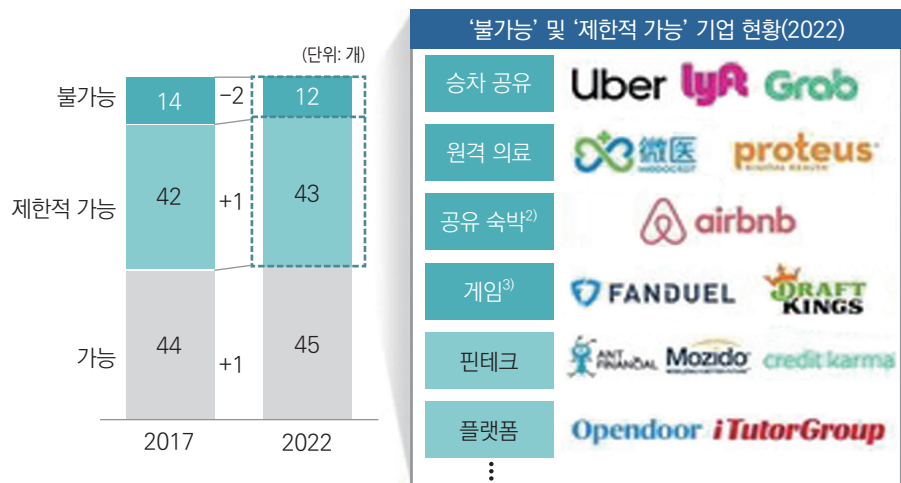
최근 산업혁신의 흐름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서비스산업은 기술 또는 여타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산업혁신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2022년 아산나눔재단 외의 보고서에는 2017년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가능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혁신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100대 유니콘 중, 2022년 국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은 2017년 대비 1개 업체가 늘어난 45개 업체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인 원격의료나 승차 공유, 공유 숙박의 경우 2022년에도 사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이 쉽지 않은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제도나

2) 아산나눔재단, Google for Startups, Startup Alliance 외(2022. 9. 7), 「스타트업 코리아!」, p. 2.

〈그림 2〉 글로벌 유니콘 비즈니스의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재검토<sup>1)</sup>



자료: 아산나눔재단, Google for Startups; Startup Alliance 외(2022. 9. 7), 「스타트업 코리아!」, p. 3.

주: 1) 2017년도 100개 기업은 Pitchbook의 누적 투자액 순위며, 2022년 시점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재검토.

2) 도입 검토 중.

3) 사행성 게임 한정.

규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본시장법, 의료법과 같이 고객 만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성격의 법률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나 규제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나 산업 간 융합 등으로 창출되는 혁신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함께 업종별로도 다양한 혁신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치사슬 단계에서 기술이 적용되거나 업종 간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에, 단계별로 제도나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공 단계에서 네트워크나 IoT 기술은 시설에, 운영 단계에서 AI나 XR과 같은 기술의 적용은 제공 서비스의 자격이나 내용에 변화를 주지만, 기존의 제도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시장의 안착이 어렵다.

## 2. 신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주요국의 규제개혁

이처럼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주요국들도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업정책은 물론 규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였다.

규제개혁 관련 보고서와 입법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영국에서는 규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운영되는 영향평가 제도와 규제 비용 감축의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BIT(Business Impact Target)가 핵심 정책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과 함께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과 「혁신, 성장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기술혁신 촉진 규제 검토 - 디지털 기술」 등의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도 모색하였다.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에 제시된 여섯 가지 세부 전략에는 미래 규제 대비위원회의 설치, 혁신 테스트의 시범적 실시, 규제 선도펀드 시범 운용, 그리고 규제에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혁신, 성장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에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와 함께 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례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표 1〉 영국과 미국의 규제개혁 방향

	영국	미국
규제정책의 전반적 흐름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 - 행정부 작성, 입법부의 심사, 승인을 통한 법률 제정 - 규제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한 행정부 주도의 보고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협력 - 입법부 주도의 법률 제정 - 행정명령을 통한 행정부의 정책 추진
주요 정책	- 영향평가 제도 - 규제 총량관리제도(OIXO, BIT)	- TFOR, Regulatory Cost Cap 기반의 규제 비용 관리제도 - 규제 검토 현대화
새로운 Biz model에의 대응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색 -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 「혁신, 성장 및 규제개혁 테스크포스」, 「디지털 기술 보고서」	신산업 분야 전반의 규제나 제도 개선보다 분야별 접근 - 「2022~2026 전략 계획」

자료: 저작 작성.

규제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기술혁신 촉진 규제 검토」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해 기존의 규제와 규범이 설계되지 않았기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국에서는 입법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따라 추진 정책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계획 및 검토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이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영국이나 EU와 달리, 미국은 규제나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다루기보다 분야별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상무부에서 발표한 “2022~2026 전략 계획”에는 기술의 리더십을 통한 혁신과 데이터를 통한 발전 기회 확대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특히 데이터 관련 전략으로 호환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표준 개선, 데이터 생태계 현대화, 데이터의 공유 및 협업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 3. 한국의 규제개혁 정책과 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과

#### (1) 규제개혁의 전반적인 흐름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별도 기구를 두어 규제 개선 노력을 하였다. 새로운 정부마다 규제개혁의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모색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덩어리 규제 집중 개선, 1년 후 성과 재검토 및 제도 개편, 그리고

자율적인 규제혁신 추진 및 행정문화 조성이라는 규제혁신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 그리고 “규제심판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을 중심으로 규제심판제도,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강화된 규제비용관리제도 등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규제개혁의 방향이나 추진체계가 정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규제 정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과 정비 기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기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규제 정비 종합계획에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6대 분야, 3대 기획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6대 분야에 포함된 신산업 분야는 실증 특례 실시, 자율 규제 추진, 기준 및 요건 완화, 불필요한 인증제도 정비와 같은 규제개혁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 (2)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신산업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규제개혁정책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2018년에 발표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체계로의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이 핵심 내용이었다. 특히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신사업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8~2021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발표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신서비스 시장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 촉진 및 기업 환경 개선, 기존 산업의 애로 해소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물론 각각의 발표에서 정책적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차 방안에서는 신시장 창출 촉진과 기업 환경 개선에, 4차 방안의 경우 신산업 및 창업 촉진과 여가/레저 활성화, 행정 절차 개선에, 그리고 6차 방안에서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보면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표 2〉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정책

정부 정책	세부 내용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 국무조정실(2018.1.19)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안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신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시장 진입·영업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2018.10.17)	-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 - 시장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 장벽 완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2018~2021, 9차) 관계부처 합동(2019.4.17)	- 기본 방향은 가능한 작은 과제의 신속한 해결과 애로사항 해소 - 신서비스 시장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 촉진 및 기업 환경 개선, 기존 산업의 애로 해소 등이 대상 - 금융, 의료, 모빌리티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2019.10.31)	-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 과제 발굴과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 규제 정부입증제 적용을 통한 규제 존치의 필요성 입증, 만약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규제 개선 -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대상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0.4.29)	-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대처하고 신산업 성장 도모를 위한 규제 체계의 재설계와 규제혁신 - 규제 개선의 추진 원칙 · 법령상 규제 이외 그림자 규제 발굴, 넓은 범위의 양적 규제 검토 · 규제검증위원회를 통한 규제의 존치 및 필요성에 대한 질적 검토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 제도혁신 방안 국무조정실(2022.2.10)	- 산업 진흥 등을 위해 운영하는 진흥·촉진·지원제도가 일부 기업에게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 해소 ·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 제외 대상·새롭게 출현한 업종에게 진입 장벽·역차별로 작용 ·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 또는 지원 공백 분야 발생

자료: 정책 발표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방안,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금융, 의료, 모빌리티 등 서비스산업과 연관된 새로운 시장이 신산업 분야로 언급되었다.

이들 신산업, 특히 서비스산업은 그 특성상 적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변화하는 시장에 안착하고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이 반영되어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유무에 대한 신속 확인 이후 시장 출시와 임시 허가, 실증 특례로 분류,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2019~2022년 동안 860건의 비즈니스모델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다. 이를 유형별·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로는 적극 행정 47건, 임시 허가 99건, 그리고 실증 특례 714건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금융과 제조 분야가 각각 27.9%(240건), 21.5%(185건)로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들 과제의 64.2%는 금융, 통신, 모빌리티 등 서비스산업과 연관된 비즈니스모델로 나타났다.

〈표 3〉 업종별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2019~2022)

단위: 건, %

총합	제조	전기/전자	에너지	기타	서비스 소계						
					금융	통신	모빌리티	의료	물류	기타 서비스	
860	185	28	35	60	552	240	65	81	47	8	111
100.0	21.5	3.3	4.1	7.0	64.2	27.9	7.6	9.4	5.5	0.9	12.9

자료: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2022. 3), 「2022 규제개혁백서」, p. 49, 규제정보포털 참고, 재작성.

〈표 4〉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유형별 규제개혁 성과

단위: 건, %

	승인 건수	전체 과제	유형별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적극 행정
승인 건수	860	860	714	99	47
규제개혁	건수	181	103	32	46
	비율	21.0	14.4	32.3	97.9

자료: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2023.3), 「2022 규제개혁백서」, pp. 58-61.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에 더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2022년 말 시점에서 법령 정비, 또는 규제개혁이 마무리된 과제가 181건(전체의 21.0%)으로 많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보인다.

## 4.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을 위한 규제정책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 현실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 전문가와 기업 담당자의 인식 차이가 명확하다. 특히 기업들은 시장 진입(40%)이나 서비스 제공(30%)에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20%) 과정에서 규제를 경험한 비율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 시장에 이미 진입한 기업보다 모델의 개발이나 검토 단계에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공에 규제로 인한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운수 및 참고



〈표 5〉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제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

		응답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업종	운수 및 창고업	7	0.0	57.1	28.6	14.3	0.0	0.0
	금융 및 보험업	3	0.0	0.0	66.7	0.0	33.3	0.0
	보건업(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	100.0	0.0	0.0	0.0	0.0	0.0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20.0	26.7	13.3	13.3	6.7	20.0
벤처	인증	11	36.4	27.3	18.2	0.0	9.1	9.1
	미인증	16	6.3	31.3	25.0	18.8	6.3	12.5

자료: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주: 1) 복수 응답 가중치(1순위=200%, 2순위=100%).

2) ① 비즈니스모델 개발 제약, ② 새로운 시장 진입에의 제한, ③ 전문인력 확보 애로, ④ (정부 지원금 등) 자금조달 애로, ⑤ 시설 확충 등 운영 비용 증가, ⑥ 판로 개척의 어려움.

업에서는 시장 진입에의 제한이, 보건업의 경우 모델 개발 제약이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 방향성, 원칙 등 전략의 구체성 부족과 정부 주도의 규제설계 및 집행에 따른 현실 반영의 미흡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그 근거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복) 규제 개선 미흡과 보이지 않는 지침이나 관행, 절차 등의 해결 미흡을 들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 규제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추진체계 효율화, 신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규제 방식으로서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요소로 전문가와 기업 담당자 모두 신산업에 효과적인 규제 방식으로서의 전환을 들고 있다. 이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신산업,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사후적,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로의 전환이 이러한 산업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정책 전반의 흐름 변화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시장 안착을 통해 경제성장과 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방향으로 규제 방식의 전환은 물론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전략 마련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규제의 설계 및 집행, 그리고 추진 과정의 단순화,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정책 방향하에서 각각의 목표를


〈표 6〉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정책 과제

		주요 정책 과제
규제 방식의 전환	자율적, 사후적,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규제개혁 전략의 구체화	혁신과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념 정립 및 산업 분류의 합리화
	규제개혁 과정에 제기된 추진 체계의 효율화	규제개혁 프로세스의 투명화, 단순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운용의 효율화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이슈 (또는 대상) 선정	규제개혁의 대상 - 중복, 다부처, 핵심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정의 해소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심층 분석 대상의 정책 과제	모빌리티,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자료: 저자 작성.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표 6〉 참조).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과제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논의되었거나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변화나 디지털 기술의 진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정책이 산업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이를 통해 실행되는 정책이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의 창출, 또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 과제 도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정책 추진의 성공 여부에서는 그 운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박정수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jspark@kiet.re.kr / 044-287-3065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연구-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공저, 2023)

「새로운 직업직무 출현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인력정책 방향」(공저, 2021)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공저, 2020)